

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7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02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‘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’에 따라 현행 「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중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이용료를 개정하여 노인복지관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띄어쓰기
- 나.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사유 삭제(안 제7조)
- 다.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피해 발생 시 ‘누구의 잘못임을 불문하고’ 변상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(안 제12조)
- 라. 현재 운영에 맞게 시설이용료 변경(안 별표2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7년 12월 11일 ~ 2017년 12월 21일까지(1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

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누구의 잘못임을 불문하고 이에 상당한 변상”을 “변상”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사회복지과 김윤한
	팀장 직위·성명	노인복지관팀장 조현준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명선 (790-5896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</u>	<u>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</u>
<p><u>제7조 (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) 시장은</u> <u>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</u> <u>우에는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취소하</u> <u>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</u> <u>있다. 이로 인하여 수탁자의 피해가</u> <u>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</u> <u>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1.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</u> <u>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</u> <u>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</u></p> <p><u>2.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</u> <u>업을 할 때</u></p> <p><u>3. 복지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</u> <u>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</u></p> <p><u>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</u> <u>용허가를 받았을 때</u></p> <p><u>5. 허가없이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</u> <u>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때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12조 (손해배상)① (생략)</u></p> <p>②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 해를 끼쳤을 때에는 <u>누구의 잘못임을</u> <u>불문하고 이에 상당한 변상</u>을 하여야 한다.</p>	<p><u>제12조 (손해배상)①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②----- ----- ----- <u>변상</u> -----.</p>

[별표2]

시 설 이 용 표

구 분	이 용 료	비 고
물 리 치 료 실	무 료	
체 력 단 련 실	무 료	
목 욕 실	무 료	
이 · 미 용 실	무 료	
도 서 실	무 료	
식 당	1,000원	1인 1식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9.6., 2012.8.3.>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9.6., 2012.8.3., 2016.8.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8.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■ 국가배상법

제2조(배상책임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·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(戰死)·순직(殉職)하거나 공상(公傷)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·유족연금·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「민법」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<개정 2009.10.21., 2016.5.29.>

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(求償)할 수 있다.